

# 노동과 삶의 권리를 위해 여성, 이제 행동이다!

103주년 세계 여성의 날

유래와 요구안 해설집



# 노동과 삶의 권리를 위해 여성, 이제는 행동이다!

## 노동

저임금, 불안정한 여성 일자리반대, 노동기본권 및 생활임금 쟁취하자!

여성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리는 국가고용전략 거부한다!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 노동권 쟁취하자!

## 여성의 삶

교육 및 보육 공공성 강화없는 이명박 정부 저출산 대책 반대한다!

낙태단속 여성차별 반대, 여성의 몸과 삶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라!

여성농민 권리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식량주권 실현하라!

가정폭력, 성폭력,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반대한다!

## 인권과 평화

모두의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전쟁위험 막아내고 반전평화 실현하자!

|    |                                       |
|----|---------------------------------------|
| 2  | 3.8 세계 여성의 날의 유래와 의의                  |
| 4  | 교육 및 보육 공공성 강화 없는 이명박 정부 저출산 대책 반대한다! |
| 8  | 사람이다 노동자다                             |
| 12 |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 16 |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 여성농민이 행복한 농촌!           |
| 20 |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실현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
| 23 | 우리는 성폭력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
| 26 | 낙태 Q&A                                |

# 3·8 세계 여성의 날의 유래와 의의

“임금을 인상하라!”

“10시간만 일하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08년 3월 8일, 미국의 방직공장에서 일하던 1만 5천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은 무장한 군대와 경찰에 맞서 외쳤습니다. 여성도 인간이라고, 살인적인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는 살 수가 없다고, 여성도 시민이라고, 정치적인 권리가 박탈당한 채 살 수는 없다고 외치며, 용감하게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동시에 발생한 경제공황 속에서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은 빵 대신 먼지를 마시며 쉬지 않고 일을 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그러나 그녀들은 정작 인간이자, 노동자, 시민으로서 그 어떤 권리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봉기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대륙에서도 빈번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 물가가 오르자 “주부들의 봉기”는 점점 빈번해졌고,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로 퍼졌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시장의 상품 진열대를 부수거나 사악한 상인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계비용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정치적 행동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여성의 참정권이 필수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4 이와같은 여성노동자들의 저항을 기억하고 나아가 전 세계 여성들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19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국제여성노동자회의에서는 ‘세계 여성노동자의 날’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의견은 독일의 사회주의자이자 여성운동가인 클라라 제트킨(Clara Zetkin)에 의해 제출된 것인데, 이는 즉흥적으로 제안된 것이 결코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분출하던 여성노동자

들의 투쟁을 하나의 흐름으로 모아내어 더욱 힘찬 운동으로 만들어나가고자 한 유럽의 사회주의 여성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준비된 것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세계여성의 날은 20세기 산업국가에서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분노하여 거리에 선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이러한 저항을 기억하고 전 세계 여성들의 연대를 도모하고자 했던 여성운동진영의 의식적인 노력을 배경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1911년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부터 여성의 날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날의 계획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기사가 정부와 사회에서의 여성의 평등에 관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모든 기사들이 여성이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여 의회를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기회를 별로 갖지 못했던 여성들도 여성의 날을 위한 회의와 시위, 포스터와 팸플렛, 신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여성의 날,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쏟아져 나와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남성들은 변화를 위해 아이들과 함께 집에 머물렀고, 그들의 아내들, 포로였던 주부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이 날은 우리의 날이다. 여성노동자들의 축제일이다” 라고 외치면서 서둘러 회의와 시위가 열리는 곳을 향했습니다. 작은 도시 곳곳에서 회의가 열렸고, 마을의 강당을 가득 채운 여성들은 노동자들(남성)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시위가 열렸고, 대규모 시위를 막으려는 경찰들과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계여성의 날은 여성들의 집단적인 저항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으며, 이 날 이후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주의당과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날은 노동자들의 국제연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즉 여성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싸움에 있어서 여성의 날은 필수적인 날로 자리매김된 것입니다.

# 저임금, 불안정한 여성 일자리반대, 노동기본권 및 생활임금 쟁취하자!

## 여성의 사회진출!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론은 골드미스 등 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여러모로 상승했다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여성들을 된장녀라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격차 최고 수준을 몇 년째 유지하고 있고, 그것도 두 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여성 비정규직은 2008년 조사에 따르면 남성 비정규직의 과반수에도 못미치는 36.7%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 중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무려 평균 임금을 받는 사람은 무려 4명 중 1명이나 됩니다.

### 〈남녀 성별임금격차〉

| 연도  | 호주 | 캐나다 |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일본 | 한국 | 미국 | 영국 | OECD 평균 |
|-----|----|-----|-----|-----|-----|----|----|----|----|----|---------|
| 98' | 85 | 75  | 86  | 79  | 90  | 76 | 63 | 58 | 74 | 76 | 78      |
| 08' | 83 | 79  | 89  | 81  | 88  | 77 | 67 | 62 | 79 | 81 | 82      |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숫자가 작을 수록 성별 임금격차가 큰 것임)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여성 노동자의 대부분이 소규모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이 여성은 61.6%, 남성은 26.3% 수준인데, 10인 이하 사업장이 저임금의 8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전일제보다는 시간제(55.3%)에서 저임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여성 노동자들 대다수가 비정규직, 소규모사업장에 분포하다보니 항상 저임금, 고용불안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규모별 성별 월평균임금과 저임금근로 비중〉

|          | 100인 이상 대기업과의<br>상대적 임금비 |      | 저임금비율 |      |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1-4인     | 40.7                     | 44.0 | 18.8  | 39.1 |
| 5-9인     | 52.8                     | 55.2 | 7.5   | 22.5 |
| 10-29인   | 53.1                     | 63.7 | 5.2   | 18.9 |
| 30-49인   | 66.7                     | 76.1 | 3.5   | 14.1 |
| 50-99인   | 70.6                     | 84.1 | 3.3   | 12.8 |
| 100-299인 | 75.1                     | 73.3 | 2.3   | 11.6 |
| 300-499인 | 83.3                     | 79.8 | 1.8   | 9.9  |
| 500-999인 | 91.4                     | 82.4 | 1.8   | 9.5  |
| 1000인 이상 | 100                      | 100  | 0.7   | 4.0  |

출처: 김영미(2009: 50)에서 재인용

또한, 저임금의 66.5%가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노동자들은 사회적  
으로 보장받아야 할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처해있습니다. 고용불안위기가 경제위기 상황이 닥치  
면서 더욱 심각해지자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이라도 감지덕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성희롱을 참  
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노골적으로 관리자가 성상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활임금쟁취는 단지 임금수준과 경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리는 국가고용전략 거부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여성 일자리로 유연근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만족도가 23%에 그치는 턱없이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2011년 근로기준법까지 개약하며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명박 정부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안정적 일자리인 여성 공무원들조차 싫어하는 유연근무제!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변형근로제,  
단시간근로제로도 불리는 유연근무제는 기존의 전일제 노동자가 하루에 8시간 안에 수행하던 일  
을 하루에 4시간, 5시간 시간제 노동자가 수행하도록 임금체계와 노동시간체계를 변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잔업특근수당 등으로 그나마 보장했던 임금은 당연히 깎이게 됩니다. 즉,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는 시간외 수당은 존재하지 않고 노동강도만 높아질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임금체계와 고용형태를 변화시키는 제도입니다.

시간제 노동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현재 전일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의 30% 정도 수준에 달하는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7 경제활동부가조사〉

|                    |        | 여                  | 남       |
|--------------------|--------|--------------------|---------|
| 시간제                | 주당근로시간 | 22.0시간             | 20.8시간  |
| 전일제                | 임금     | 53.1만원             | 63.1만원  |
|                    | 주당근로시간 | 47.5시간             | 48.5시간  |
|                    | 임금     | 133.5만원            | 217.4만원 |
| 전일제 대비 시간제 월평균 임금비 |        | 56.1만원/181.2만원=30% |         |

출처: 황수경, 재구성, 2008

이미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조차도 자발적으로 시간제 노동을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 및 가사를 병행하거나 일자리가 없어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처럼 시간제 근로, 즉 유연근무제는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자본과 정권의 이득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여성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 모두에게 독이 될 유연근무제는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 노동권 쟁취하자!**

돌봄 노동은 여성이 집안에서 수행하던 육아 및 가사노동 등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일을 말합니다. 아이를 돌보거나 청소, 설거지를 하거나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은 본래 여성이 가정 내에서 수행하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돌봄노동을 여성 개인에게 미룰 책임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책임지겠다며 시작한 일자리 중 하나가 바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입니다.

8

그런데 사회서비스 일자리 종사자 평균 임금은 대략 49~78만원으로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0%를 밑돌고 있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평균임금은 60만 4천 79원인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49만 4천 760원으로 사회보험가입률이 5.5%대입니다. 간병노동자의 경

우 75.7%에 육박하고 이들 중 4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단시간근로 고용형태를 선택한 이유〉

|                      | 단시간            |                |                |                 |                |
|----------------------|----------------|----------------|----------------|-----------------|----------------|
|                      | 전체             | 25세<br>미만      | 25-35세<br>미만   | 35-45세<br>미만    | 45세<br>이상      |
| 근로조건 (근로시간, 임금 등) 만족 | 9.0            | 6.8            | 8.7            | 9.1             | 9.8            |
| 안정적인 일자리             | 0.6            | -              | 0.9            | 1.2             | 0.5            |
|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 33.7           | 10.5           | 13.0           | 31.0            | 50.0           |
|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 5.7            | 9.1            | 7.2            | 4.6             | 4.6            |
| 전공,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 1.3            | 1.2            | 3.9            | 1.7             | 0.3            |
| 경력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     | 3.8            | 5.7            | 13.3           | 3.3             | 0.6            |
| 육아, 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해    | 24.3           | 1.1            | 36.2           | 37.5            | 21.2           |
|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병행    | 11.0           | 60.2           | 7.4            | 0.7             | -              |
|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   | 3.0            | 1.6            | 0.6            | 3.0             | 4.4            |
| 근로시간 신축적 조절          | 6.9            | 3.9            | 8.3            | 7.2             | 7.4            |
| 기타                   | 0.8            | -              | 0.5            | 0.7             | 1.2            |
| 전체                   | 100.0<br>(942) | 100.0<br>(154) | 100.0<br>(117) | 100.0<br>(25.9) | 100.0<br>(411) |

단시간노동자와 한시노동자의 중복으로 전체 합계는 일치하지 않음

출처 : 『여성, 단시간근로의 장점은 존재하는가?』 2009, 권혜자(고용정보원); 김경란(2010) 재인용

문제는 이토록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열악하다보니 서비스의 질 또한 열악하기 그지없고 수혜 대상자들도 매우 소수라는 점입니다.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면서 육아 및 가사노동의 책임은 여전히 여성 스스로 지어야만 하는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 교육 및 보육 공공성 강화 없는 이명박 정부 저출산 대책 반대한다!

한국의 출산 정책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한국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70-80년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었던 “딸 아들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와 같은 출산 억제 구호들이 90년대 들어서면서 “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더 행복합니다”와 같이 출산을 강조하는 표어들로 바뀌고 있는 걸 보면 그 변화는 사뭇 놀랍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출산 관련 구호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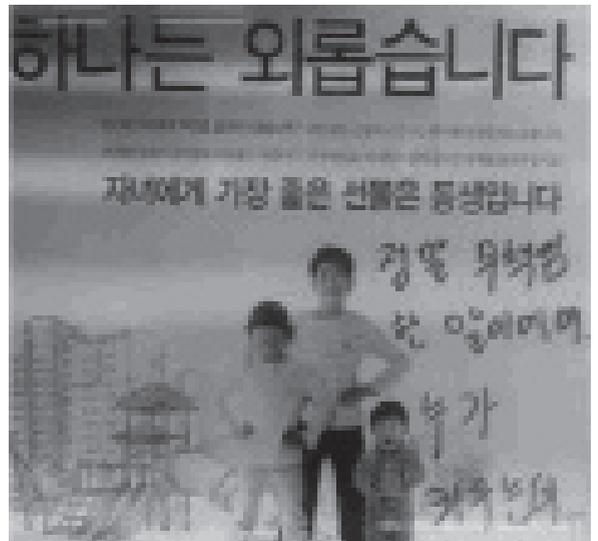
한국의 출산율은 2009년 기준으로 1.15명! 분명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최하위 수준입니다. “저출산은 생산 인구를 감소시키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켜 결국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저출산 위기 시나리오는 정부와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은 저출산 위기의 주범인 것처럼 취급됩니다.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여성으로만 그려집니다. 이런 시나리오 속에서는 “저출산이 과연 정말 위기인가?” “수년째 계속되는 청년 실업과 노년층 실업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

순히 아이를 많이 낳는 생산 가능 인구 증대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가?”와 같은 저출산에 관한 본질적 질문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또한 몇 명의 자녀를 낳고 키울 것인지를 결정할, 여성이 가져야 할 출산권, 즉 출산의 자유와 선택권은 늘 국가적 목표의 수단으로만 여겨질 뿐 적극적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2011년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5)이 시행되는 첫 해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출산의 문제를 사회에서 공동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가 보육과 교육 문제를 공공 의제로 삼으려는 계획은 없고, 시장에 맡기기 위한 조치들만 가득합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보다는 자율형 어린이집 확충을 서두르고, 남성과 여성과 사회가 함께 양육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이라는 명목하에 여성들의 일자리를 주로 유연화시켜 오히려 여성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라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저출산 문제에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일까요?

저출산 정책은 무엇보다도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낳으라고 주장하기 전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얼마 전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라는 정부의 지하철 홍보 광고 아래 누군가가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말이에요, 누가 키우는데...” 그렇습니다. 여성에게 모든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부과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없이 무조건 자녀를 낳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성이 가져야 할 출산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구요. 여성이 출산의 주체가 되고, 보육과 교육을 남성과 여성,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될 때, 그 때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낙태 단속 여성 처벌 반대, 여성의 몸과 삶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라!

현재 한국에서는 형법 269조에 따라 낙태를 한 여성과 의사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긴 하지만, 사회경제적 사유가 낙태 허용 사유로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낙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낙태에 관한 법은 사문화된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70-80년대 정부의 출산 억제 정책 시행과 함께 정부는 때로 낙태 시술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100% 완벽한 피임법이 존재하지 않고, 여성이 남성에게 적극적으로 피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낙태는 최후의 피임법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여성들에게 낙태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낙태를 하는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일 뿐 그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여성들에게 낙태는 손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와 낳지 않았을 때 자신과 아이에게 벌어질 모든 상황들을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낙태가 아이와 여성 모두에게 가장 최선일 때 낙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2005년 보건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보다 더 많이 낙태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2009년 기준 2억 6204만원이 든다는 최근 통계는 왜 기혼 여성들이 낙태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지를 보여줍니다. 그 뿐 아니라 많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았을 때 따가운 사회적 시선은 고스란히 그 여성과 아이에게 갑니다. 여성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무조건적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09년 하반기부터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시술을 막겠다고 낙태 시술 의사를 고발하기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는 낙태 단속과 처벌을 저출산 정책의 한 방법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낙태 시술 비용은 10 배 이상 상승했고, 일본이나 중국 등지로의 원정 낙태 시술까지 등장했습니다. 결국 빈곤한 여성들은 급등한 낙태 시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불법 시술소에서 안전하지 않은 낙태 시술을 받도록 내몰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한 남편이 낙태한 부인을 고발해 부인이 형사 처벌을 받았고, 또 파혼한 전 여자 친구가 낙태했다며 여자 친구를 고발한 남성이 등장하는 등,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법은 성관계, 임신, 임신중지(낙태),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여성이 한 인격체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여성의 몸과 삶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에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65세 미만 부부 6쌍 중 1쌍이 한 번 이상 배우자한테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이유로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뿐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수많은 여성들이 성희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여성 노동자들은 해고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이 경험하는 성희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드러나지 않는 성희롱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면서 집회나 시위, 파업의 현장 속에서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륭 여성 노조원을 성추행한 경찰관이 오히려 여성 조합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직장에서, 투쟁하는 현장에서 함께하는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폭력 행사 상황을 목격하고서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고 방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료이자 동지로서 함께 서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부당하게 가해지는 폭력에 함께 맞서 싸워야 합니다.

# 사람이다 노동자다

노마

내가 중학생이던 99년부터, 엄마는  
8월 맞이하신 시부모님을 모셨다



2007년,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의 치매는 더 심해지셨다



엄마 에겐 주말이 없었다  
엄마는 그런걸 '인이 박혔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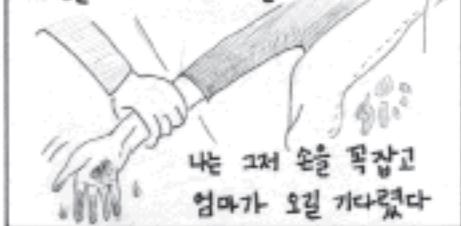
노인을 모신지 11년째가 되면 2이0년,  
한번은 가족들이 대신 할아버지를 돌보고  
엄마가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시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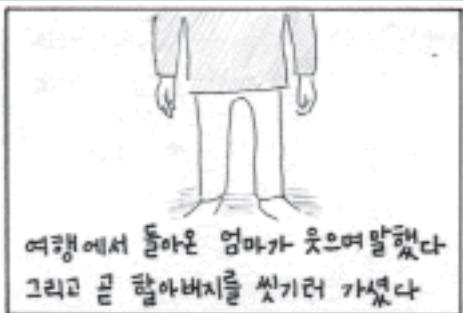


..엄마가 돌아오던 날은 내가 당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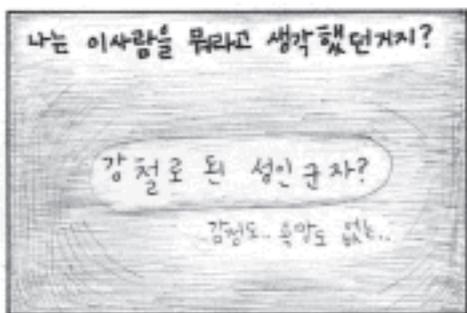


꼭꼭 다다며 바지안으로 손을 넣어  
대변을 만져보려는 할아버지..





여행에서 돌아온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곧 할아버지를 씻기러 가셨다



나는 이 사람을 뭐라고 생각했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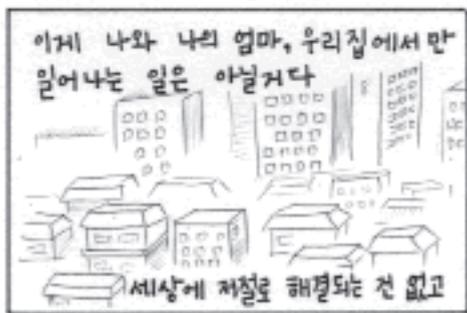
강제로 된 성인 군자?

감정도 욕망도 없는..



65세 노인이 535만명, 전체인구의 11%.  
10명중 1명이 노인인 나라에서\*

\*통계청 2010년



이제 나와 나의 엄마, 우리집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거다

세상에 저절로 해결되는 건 없고



내가 안락하고 싶다면 다른누군가가 대신  
그 일을 떠맡고 하고 싶거나, 방지되서  
꿈고있거나 하는 것이다



일면히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살아갈수 있게 돌보는 사람들

양육·요양·간병·활동보조 등을 하는



돌봄노동자라 불리는 사람들



사회에서 돌봄노동자가 하는 일들은 하는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것이 아니다



유료소개도 이제 그만  
병원이 직접고용하라

아무도 양육을, 요양을, 간병을, 활동보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에서 사람이 살수 있을까?

각자 집 식구끼리 알아서 할일. 사람이 없다면 돈을내고 시장에서 상품을 사라는 정부



이명박정부. 그런데 그 집에 돈도없다면 죽던말던 그건 너 사정



여성, 특히 '아줌마'라는 딱지가 붙여진 여성이 알아서 하면 되는일



그러니 편의점 카운터보다 낮은 임금 2000원을 저임금을 받아도 되는일



잠을 제대로 못자 뒷골이 땀겨  
죽을것 같아도, 웃으며 해야 되는 일



그들은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인데  
왜 사회는 그들을 책임지지 않을까?



저임금 이턴 장시간 일을 하던  
왜 '여성'이 웃으며 해야 할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길까?



강철로 된 성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손톱으로 피부를 찢어보면 손톱자국이  
남는, 그들도 사람이다



사회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그들은 노동자다



3월 8일 여성의 날 외치자!

사람이며, 노동자인  
돌봄노동자들의  
당당한 권리와 요구를!!



#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성소수자'는 여성 및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성 전환자) 등, 이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한다고 알려진 이성애가 아닌 다른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뜻합니다.

## 누가 성소수자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차별이 일어나나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우리 회사에는 성소수자가 없는데... 누가 성소수자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차별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셨나요?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밝혀질까봐 불안에 떨며 거짓말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 자체도 차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자신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직장에서 그런 불안함은 더하답니다.

'해고노동자 홍석천'을 기억하세요? 2000년 9월, 홍석천씨는 동성애자임이 밝혀지자마자 출연 중이던 라디오 시트콤과 아동프로 '뽀뽀뽀'에서 바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일어난 일이 성적 지향으로 인한 부당해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고용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2009년 미국에서 발간된 한 보고서는 약 68%의 성소수자들이 고용 차별을 겪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홍석천씨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직접 대하는 교사가 동성애자라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해고당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한국에는 성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법, 제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은 쫓겨 숨어있게 되고, 그에 따른 차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 성소수자들과 함께 하기! 이렇게 해볼까요?

성소수자들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 가운데에서도 성소수자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차별과 편견 때문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쉽게 드러내지 못할 뿐입니다.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호모, 정신병, 변태, 비정상, 에이즈의 주범 등)을 쓰거나 농담, 가십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당사자들은 자괴감과 수치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동료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면 또 다른 차별과 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장동료가 해고, 감봉, 이직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된다면 노동조합이 앞장서 방어해야 합니다.

부당함에 맞서 노동조합이 함께 싸운다면 성적지향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일터와 사회가 한층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 차별금지법은 무엇일까요?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아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성별등의 사유에서 고용차별,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교육에서의 차별,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
2.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개인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3.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4.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를 하거나 허용하는 행위.

19

우리사회에 만연한 차별들, 법적, 제도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차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들, 괴롭힘처럼 감정적인 차별들을 차별금지법으로 막아내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한번쯤은 삶속에



서 차별받고 아파합니다. 여성이라서, 장애인이라서, 성소수자라서, 이주민이라서, 한부모가정이라서..... 이러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제정되어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처럼 발생한 차별을 시정하고 앞으로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 차별금지법, 성소수자에게 왜 필요할까요?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특히 성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법과 제도도 없는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성소수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과 더불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차별(동성결혼), 괴롭힘(동성애혐오와 증오범죄) 등에 노출되어 있는 성소수자에게는 위와 같은 차별을 규제하는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른 고용 차별 금지 또한 명시하고 있으므로, 성소수자 노동자가 일터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면 차별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법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사회의 편견과 억압과도 동시에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곁에 있는 성소수자.  
 그 이가 홀로 부딪히는  
 거대한 편견과 억압의 벽을 함께 넘어주십시오.  
 그 벽 너머에는,

20 모든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가 노동자의 일할 권리, 단결할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듯이,  
 노동자도 성소수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함께 싸웁시다.



2010년 3.8 여성의날 집회에서 연대발언을 하는 성소수자들.  
 성소수자에게 좋은 것은 여성에게도 좋다!

#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 여성농민이 행복한 농촌!

## 여성농민을 힘들게 하는 것들

### 가부장제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급격한 사회변화로 전통적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고 개별화되었으며 산업구조의 변화로 다양한 가치관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평가는 뒤로 유보하더라도 지난 시기의 마을공동체의 운영방식에는 평가해볼 내용이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그 자체로는 고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성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또다른 성에게는 희생과 헌신이 강요된다면, 혹은 그 헌신과 희생에 기반한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공동체에서 평생을 살아가야하는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삶이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씨족이나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한 연줄망이 여전히 농촌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많은 인구가 모여사는 도시와는 달리 생활전반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성농민의 삶은 마을내의 규범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이것이 종종 여성들에게 억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정폭력

지난 2001년 정읍과 2003년 횡성에서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43.8%와 57.8%로 타 도시지역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정신적 폭력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넓은 의미의 폭력(권리에 대한 침해)을 담는다면 가정 내에서의 여성농민에 대한 폭력의 발생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사노동을 포함한 이중 삼중의 노동

2008년 UNDP <인간개발보고서>에서 농민의 생활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남성 농민의 가사노동시간(요리와 청소)이 7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위권 국가의 남성들의 가사노동 20분에서 1시간 14분인 것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것입니다.

여성농업인실태조사에서 보면 평균 여성농민의 농업노동시간은 농번기를 기준으로 64.3%가 10-14시간 일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가사노동은 평균 3시간 전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사일 하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결과 농사일, 집안일, 그리고 농외 소득을 얻기 위한 노동을 포함하면 여성농민의 노동은 이중 삼중으로 고스란히 여성농민의 몫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지위의 불평등

농가 경영주에서의 배제\_ 농사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총괄하는 경영주가 남편인 경우가 70.3%이며 여성농민이 경영주인 경우는 26.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못함\_ 1500가구의 여성농민 중 본인 명의의 농지가 전혀 없는 여성농민은 1,181명으로 전체의 78.7%이며, 농지의 일부라도 본인 명의의 농지가 있는 경우는 21.3% 정도입니다.

## 신자유주의

여성농민이 농사일의 노예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성농민들의 노동시간은 우리나라 여성평균 노동시간인 7.5시간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가사노동을 포함하여 평균 18.5시간에 달하고 있습니다.(농림부 통계자료 2006년 출처)

여성농민의 노동시간이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된 계기는 농업 구조조정과 함께 농업의 기계화가 이루어졌지만,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는 밭작물 재배 과정은 이와 상관없이 대부분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방농정' 하에서 농가 부채는 급증했지만, 농가 소득은 오히려 급락하고 있어서, 여성농민들은 가계를 꾸리기 위해 농사일 이외의 일을 겸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농업 생산수단 (농지, 농기계 등) 및 농업 경영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농지와 농기계입니다. 그중에서도 농지 소유의 경우는 단순히 생산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정부정책자금 및 경영에 있어서 판단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의 지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농기계에서도 농지와 마찬가지로 남성위주의 소유와 이용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논농사의 기계화율은 상당히 높지만 여성농민이 주로 담당하는 밭농사의 경우는 기계화가 더딥니다.

여성농민의 지위는 여전히 있어도 없는 유령같은 존재입니다.

이처럼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여성농민이지만 농촌사회의 뿌리깊은 가부장적 의식과 관행, 남성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되어 여성의 권한과 가정내 지위수준, 농업의 공동주체로서의 법적지위는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생산의 주체로 인식되기보다는 생산보조자, 농가주부,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이주여성농민

농업과 농촌에 대한 기회와 사회적 인식의 저하는 농촌가족의 붕괴(이혼및 가출여성농민의 증가) 및 농민들의 결혼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주여성들과의 결혼이 장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 농림어업종사자의 국제결혼 비율이 40%가 넘고 있습니다.

베트남 처녀와 결혼 하세요. 초혼 재혼 장애인 환영,  
특히 시부모님을 잘모시고 복종을 함, 절대 도망가지 않음

농촌 들녘에서 흔히 볼수 있는 현수막입니다. 노동자로든 결혼이민이든 이주하는 여성들은 그나라의 가장 가난한 여성들입니다. 국제 결혼은 매매혼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그나라의 가부장제에 의한 강요이기도 합니다. 농촌지역의 봉건성은 가정폭력의 문제 2세 아동의 문제까지 확산되어 농촌사회 전반에 심각한 모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여성농민이 행복한 농촌사회

#### 농사일과 가정생활에서 조화롭고 평등한 남녀 역할 모색

자녀양육, 노인부양, 가족간호 등 돌봄 노동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활동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확산되기 위한 법제도적, 행정적, 문화적 노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농민의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나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농사일에서 여성농민의 주체화

**여성농민 공동체로 협업화** 농촌 공동체 농업, 협업적 소농의 농업, 소농의 협업화 등으로 여성농민이 생산의 주체가 되어 신자유주의식 농업 발전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발전 시키도록 해야합니다. 마을단위의 공동 작목반이나 소규모 가공 등에서 여성농민들이 공동체를 통해 생산과 가공, 유통에서 주체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소농운동 전개** 농업의 특징은 여성성과 일치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보살피는 돌봄노동에 익숙한 여성농민은 농사에서도 똑같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파종에서 재배, 수확, 종자관리 까지 여성농민의 손길은 농업생산 전반에 위력을 발휘합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이고 관계중심을 농업에 발전시켜 나간다면 농업에서의 여성의 지위 변화는 물론이고 우리사회의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실마리를 쥐게 될 것입니다.

**종자주권 실현 및 지역먹거리 운동으로 식량주권 실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멋대로 만들어 놓은 세계 먹거리 체계와 초국적 기업의 농업 지배를 끊고 소농과 여성농민에 의한 토종씨앗 지키기,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식량주권을 실현하도록 해야합니다.

### 여성농민의 법적 사회적 지위 확보

여성농업인 육성법과 지역단위의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가 만들어 져서 여성농민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이 농촌현장 곳곳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 가정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공동의 대응

가정 및 사회전반의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은 개인이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반 성폭력 활동을 진행하고 공동의 대응으로 바꾸어 내야 합니다.

#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실현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충돌 위험 현실화, 이명박 정부 하 정전체제의 불안정성 드러나

정전상태인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빨리 전쟁 위협을 해소하고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이며 대통령의 임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통일부를 없애겠다는 소동을 크게 벌인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주무부서인 통일부를 없애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은 애초에 통일의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정부는 당선 후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가장 큰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대북적대정책이 이어지고 북한붕괴를 전제한 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면서 한반도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서해해상분계선 일대에서 공격적으로 군사훈련을 전면진행하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미군이 임의로 그은 NLL(북방한계선)과 북이 설정한 서해분계선의 차이로 서해바다는 전쟁의 화약고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의 '군사적 타격' 경고가 거듭되는 가운데에서도 남은 대규모 사격훈련을 강행하면서 정전협정이 성립된 이래 처음으로 북에 의한 포격이 발생하여 안타깝게 인명을 잃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남측 정부는 '몇 배로 응징', '말보다 행동이 필요' 등 강경 일변도의 대응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연평도 사태 이후에도 무분별하게 최대 규모 전쟁연습을 벌여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

는 등 군사적 모험주의가 한층 심해지고 마치 냉전시대로 완전히 회귀한 듯합니다.

응분의 대가를 돌려주는 것으로, 대결과 보복을 반복하는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군사적 모험주의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켜 평화를 지키기는커녕, 우리 민족의 존립조차 위태로워 질 수 있습니다.

지난 기간 통일의 약속인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만 잘 지켰어도 이러한 가슴 아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4공동선언 3항에는 서해를 평화협력지대로 전환할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국지전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쟁의 화약고인 서해를 서해평화협력지대로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고 전쟁을 유발하는 전쟁훈련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례적으로 3월에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훈련 등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협적 전쟁훈련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연평도 이후 추가적 충돌은 피했으나 군사적 긴장상태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을 공세적으로 추진하라는 권고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7년 만의 애기봉 점등 등 해상 뿐 아니라 육상 분계선 일대도 곳곳이 시한폭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꼭 60년 만에 또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불안 속에 가슴 졸이며 작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진행해 온 대북적대정책이 한반도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더욱 통일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나 전쟁이냐를 둘러싼 팽팽한 격돌이 벌어질 2011년도에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군사회담 등 남북간 대화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통일부는 ‘북 체제변환을 통한 흡수통일’을 업무계획의 기본 기조로 잡는 등 강도 높은 압박정책을 계속 펼칠 기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도발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군사적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시급히 대화를 재개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해법도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대결을 중단하고 남북간 북미간 대화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 여성들의 평화 실천 절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재앙은 누구에게나 미치지만 약자에게는 더욱 폭력적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여성들이 희생되고 있으며 끔찍한 폭력인 인종청소의 대상이 되어 전쟁난민으로, 성폭력 피해자로 떠돌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삶의 터전인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벌어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이유도 전쟁을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를 전쟁 일보 직전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하며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보관련 문제가 터지면 모든 일들이 그 일에 묻혀 버립니다. 군대문제, 전쟁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극대화된 지금의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소수자의 문제를 얘기하기 어려우며, 얘기한다해도 이는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해버립니다. 정부는 군인에 대한 찬사, 전사로서의 남성성 극찬을 통해 상대적으로 여성을 약자화, 피해자화하고 남성에 의해 보호받는 이미지로 만들면서 군사주의를 더욱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빠르게 해소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평화실천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평화 통일을 원하는 여성들의 폭넓은 연대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정책을 폭로하고 과도한 국방비를 사회복지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절마 전쟁이 나겠어?' 하는 전쟁불감증은 이제 그만~!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 함께 합시다.

# 우리는 성폭력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금양물류 여성노동자에게 일어난 일

2009년 4월 18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000조장은 그녀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 둘이 자고 나면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라는 문자를 보내며 그녀에게 끊임없이 성희롱을 가했습니다.

2009년 6월 18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소장은 '너희 집에 가서 자고 싶다'며 하룻밤 사이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전화에 시달리다 못해 전화 통화 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취했습니다. 회사동료와의 회식자리에서는 "야, 이년아, 이리와봐"라며 욕설을 하였고, 작업도중 그녀 엉덩이를 무릎으로 치고, 어깨와 팔을 주물럭거리며 육체적인 성희롱을 가했습니다. 작업지시를 할 때에도 "시발, 개좃같다, 말도 안 듣는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물론 작업도중 "간밤에 힘 좀 썼더니 오늘은 기운이 딸린다", "나는 밤새 해도 끄떡없다"라는 욕설과 음담패설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녀가 없는 곳에서 직장 동료에게 "00(피해자이름) 그 년이 한 번 대줄 것 같은데 영 대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하는 끔찍한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 사건이 알려진 이후...

2009년 11월, 더 이상 참지 못한 그녀는 사건을 공론화합니다. 그런데 금양물류 000소장은 그녀가 문자, 통화내용을 녹취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붉히고 소리를 지르며 퇴근 후 2시간 동안 그녀를 다그치며 핸드폰을 가져오라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000사장은 그녀에게 "전화녹취는 불법이기 때문에 당신이 불리하다"며 그녀를 계속 협박했고, 심지어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할 경우 증인을 설 것이냐며 직장 동료에게 진술서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12월 9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성희롱을 일삼은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드디어 회사가 나선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핸드폰 문자를 동료에게 보여주며 고통을 하소연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대상으로 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던 것입니다. 징계 이유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 잘못된 언행을 감행하여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성희롱 당사자인 000소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정직 6개월과 보직변경'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14일 재심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했지만, 사장은 "6개월 정도 쉬고 있으면 임금을 통장으로 넣어주겠다"며 휴직을 강요했습니다. 17일 재심 결과, 그녀는 '감봉 3개월, 시말서 제출'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0년 8월 12일, 그녀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하고 조합원의 신분으로 지회에 사건을 제보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녀는 문자로 징계해고를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 그녀가 홀로 싸우지 않도록, 함께합시다!

그녀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인 금양물류에서 14년간 일해 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는 사실상의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반성은커녕 오히려 관리자와 경비인원을 동원해 성희롱 사실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그녀에게 폭행(전치4주) 등을 행사하였습니다.

현장과 사회의 무관심 또한 그녀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그깟 일 가지고..."라는 반응이나, "그녀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시선입니다. 그러나 한 여성노동자가 겪은 수치심과 고통을, 그러한 잣대로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금양물류 뿐만 아니라 성차별/성희롱이 만연한 직장과 사회에서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비슷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 앞에 놓인 거대한 벽-성차별/

성폭력이 만연한 직장과 사회-에 그녀 혼자 맞서도록 내버려 두지 맙시다. 그렇다면 그 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홀로 싸우지 않도록, 그녀와 함께 투쟁합시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차별과 착취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왜 여성노동자에게는 이런 일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가!", "성희롱에 문제제기하는 여성이 왜 해고되어야 하는가!" 라고 세상에 당당하게 질문하며, 힘찬 연대의 힘으로,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사용자인 현대자동차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라! 공개사과 진행하라!

성폭력 피해자의 부당해고 및 징계철회를 요구한다!

이후 성폭력 방지대책과 교육을 보장하라!

#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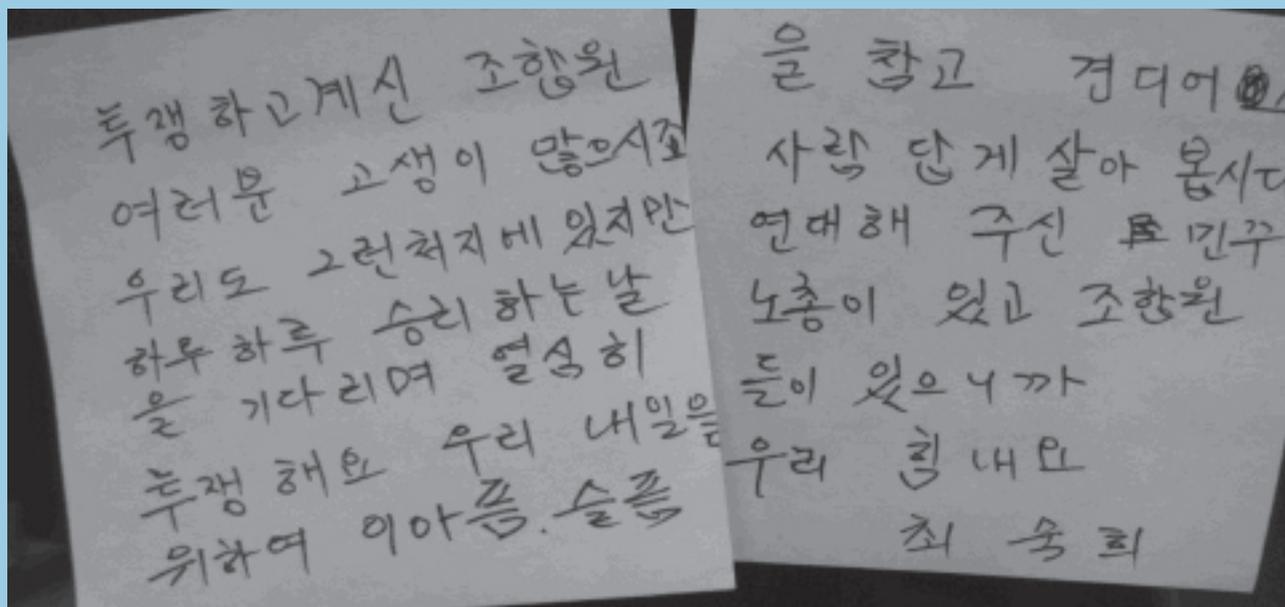
흥대에서



"학교나 총학이나 민주노총이나 연대해주는 사람들보고 외부 세력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이런 '외부세력' 없었으면 이 투쟁 못했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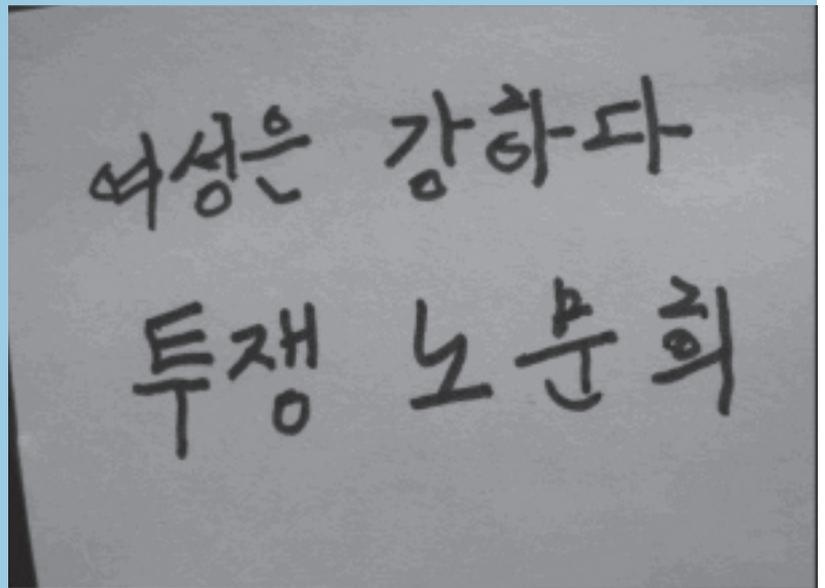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지금도 농성하면서 뜨개질로 다시 일하게 되면 쓸 화장실 청소할 수세미도 만들면서 일터로 돌아갈 생각만 해요.

열심히 투쟁해서 일터로 돌아간다면 정말 열심히 다른 곳에도 연대하러 다닐거예요."



## 노문희

“처음에는 민주노총, 투쟁, 구호 외치는거 별로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노조를 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사장도 바뀔거라고 생각합니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민주노총이 든든한 테두리가 되어주고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어요. 사실 구호 외치고 그런거 원래 우리가 할 일인데 지금은 우리가 잘 못하니까 대신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구호 외치는 거나 그런거 연습 좀 하고 해서 나중에는 직접 외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힘차게 투쟁!”



# 낙태 Q&A

## Q1 낙태의 현실은 어떻게, 낙태 범죄화는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한국에서 낙태는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낙태금지법은 현실과 심각하게 괴리돼 있습니다. 공식 통계만 봐도, 한국에서 낙태는 연간 34만 건입니다. 산업화 기간 동안 한국 정부는 여성들이 아이를 너무 많이 낳는 것이 문제라며 피임시술을 권유하고 묵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출산률이 떨어지자, 갑자기 낙태를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낙태를 반으로만 줄여도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며 낙태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조치에 고무받아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시술 병원을 고발하는 활동을 벌이면서 낙태를 범죄화하는 분위기가 강화됐습니다. 법원은 급기야 지난해 10월에 낙태 한 한 여성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낙태 불법화와 단속은 여성을 궁지로 몰아넣어 위험천만한 사태를 만듭니다. 여성의 출산은 여성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를 낳길 원치 않는 여성은 필사적으로 낙태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낙태가 금지되면 여성들은 불안전하고 비위생적인 불법 시술에 매달리거나, 비싼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고발이 시작된 지난해 초에 낙태 시술비가 무려 5백만 원까지 솟았다고 합니다. 낙태 고발이 두려워 병원들이 남편이나 남자친구 동의를 얻어 오라고 하자 이런 상황을 악용해 여성에게 낙태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할 권리는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 Q2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무책임한 행동 아닌가요?

'프로라이프 의사회', '낙태반대운동연합' 같은 일관된 낙태반대론자들은 태아가 생명이므로 낙태는 살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태아가 인간이 될 수 있는 잠재적 형태이긴 하지만, 태아 그 자체가 인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태아는 독립적 인격체도 아닙니다. 태아는 여성의 몸에 완전히 의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가 이미 한 인간으로 살아 숨쉬는 여성의 삶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결국 태아의 생명을 빌미로 여성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한편, 여성의 삶에서 임신과 출산은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여성의 삶 전체의 계획을 뒤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임신과 출산의 전 과정을 여성 자신이 통제할 권리는 여성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와 밀접히 연관돼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따르는 모든 일을 감당할 최우선적인 당사자는 여성이므로, 낙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여성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낙태반대론자들은 피임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해 놓고 무책임하게 낙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직 1백 퍼센트 안전한 피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처럼 보수적 성교육이 지배적인 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이 임신의 전 과정과 피임법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합니다. 안전한 피임법을 제대로 교육하는 동시에, 그러나 피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을 때는 여성이 안전하게 낙태를 할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 Q3: 낙태가 노동자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낙태가 노동운동의 과제가 돼야 하는 이유는, 낙태 피해자의 압도 다수가 바로 노동자·서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낙태 불법화로 목숨을 잃은 여성 중 부자 여성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부 덕분에 비싼 돈을 주고 안전한 시술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난한 노동자·빈민 여성들은 돈이 없어서 불안정한 뒷골목 시술에 매달리거나 위험천만한 자가 시술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낙태를 다룬 영화 <더 월>을 보면, 간호사인 여성이 안전한 시술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뜨개바늘로 자궁을 찌시다가 고통스러워 하고, 결국 싼 값에 불법 시술사를 불러 와 시술을 받다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노동자·빈민 여성의 비극이 미국에서 낙태 결정권 옹호 운동의 배경이 됐습니다.

음성적으로 낙태 시술이 보편화된 한국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여성이 거의 없다 할지라도, 낙태 단속이 강화돼 낙태 비용이 치솟으면 그 비용을 구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덜 안전한 시술을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70퍼센트가 비정규직이고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더더욱 노동자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낙태가 공격받는 분위기는 노동자 전체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결정권 보다는 여성의 아이 낳는 구실을 더 강조할 것이고, 보수적인 성관념을 확대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낙태는 보수파들이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공격할 때 좋은 소재로 활용돼 왔습니다.

## Q4: 한국에서 낙태 단속에 반대하는 운동이 있나요?

한국에서도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시술 병원 고발 운동을 벌일 때, 여성·노동·사회단체 등이 모여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옹호하는 단체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사회주의 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 전국여성연대, 진보신당 여성위원회/성정치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가나다순) 103주년 3.8 국제 여성의 날 공동기획단에 소속된 단체 대부분과 한국의 주요 여성운동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8 국제 여성의 날 주간에 청계광장에서 낙태 단속에 항의하는 행동을 했고, 지난해 8월에는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을 정리해 낙태 결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요구들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주관한 102주년 3.8 여성의 날 집회에서도 낙태 처벌반대는 주요 요구 중 하나였습니다.

## 발행 \_103주년 3.8 공동기획단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성소수자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  
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여성위원회/ 성정치위원회,

